

# 도-정치권, “지역발전 위해 힘 합치자”

### 내년 국비확보·도정 현안 해결 정책협의회… 탄소법 후속조치 마련·새만금 조기 개발 등 논의

전북도와 여·야 3당의 균형을 유지한 지역 정치권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전북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4년 연속 6조원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과 탄소법 제정 후 후속조치 등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논리 개발 등 부처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현재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7년 예산요구 규모는 총 388.1조원으로 전년 대비 11.7조원(3.0%) 증가했으나 전북 지역 예산은 SOC분야에서 오히려

15.4%가 감소돼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통과된 탄소법 관련 후속 조치와 자금운용본부 이전 및 금융타운 조성 등을 위한 예산 반영, 새만금 조기 개발 등 지역 현안을 협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와 지역 정치권은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지역권 산림치유원 등 기재부 쟁점사업과 새만금 관련사업, SOC·산업·농림분야 사업, 예타통과와 예산확보 대응, 국가중장기계획 반영대상 등 5개 분야로 나눠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을 반영하는 데 역량을

쏟기로 협의했다.

특히 새만금 내부(동서 2축·남북 2축) 간선도로 조기 추진,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구축,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대야 철도 구축 증액 반영 등에 정치권과 도·시·군이 공조 협력체계를 돈독히 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도정현안 건의 사업으로는 탄소법 제정 이후 도의 정책방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자금운용본부 부속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예산 반영 및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재개 지원 요청 등이 주로 논의됐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용지 국가 주도 매립', '수서발 KTX 개통 시 전라선 증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의 지원, '중국인 무비자 환승 공항' 체류지역 확대를 통한 전북 지역 무비자 체류가능 지역 포함'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은 SOC를 비롯한 농림, 산업 분야 예산은 줄이고 신규사업 억제와 계속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조이므로, 도의 인정을 국민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해보다 정치권과 도의 공조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 정동영, 부영건설 임대 주민 교통 지적

국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주병)은 27일 “부영건설 임대아파트의 총체적 부실로 입주인 850가구가 교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주민은 하차와 임대료 인상 등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독 부영 임대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부영은 LH공사로부터 토지를 값싸게 분양받고, 건축비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용자받는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권리는 누리면서 부실시공, 부실감리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임대료는 높게 받는 등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취지를 외면한 채 기업의 이익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2015년 접수된 하자는 지하주차장 및 천정누수, 현관과 본체벽 이격 현상 등 개인 161건, 공용 160건이다.

또한 임대료도 인근 임대아파트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가구들은 부영 측으로부터 임대료 5% 인상을 요구받았다. 59.97㎡ 규모의 경우 당초 임대 계약은 보증금 9200만원, 임대료 30만원이었지만 이를 5% 인상, 9660만원에 월 31만5000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또 “과선교(김제철교)가 노후화로 붕괴 위험 수준인 D~E 등급관정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다고 공사를 미루면 안된다”며 즉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지리산 산악철도 파일럿(시험구간)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신광영 기자

## 정운천, 미래융합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국회 정운천(전북 전주시,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미래융합산업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후원과 국회, 산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존 정부 부처들이 기존 행정관행에서 탈피해 창조혁신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산업융합이말로 창조혁신경제의 핵심적 전략인 만큼, 산업융합을 통해 제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인 중앙대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 산업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농식품산업도 글로벌경쟁여건과 ICT산업환경 속에서 융합하는 혁신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인들이 혁신에 따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 김수민 출당조치 ‘금물살’

당과는 무관한 사건이라며 ‘김수민 사건’에 선을 그어왔던 국민의당이 당내의 개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김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점증하는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사집중’ 인터뷰에서 “민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 등 있는 그대로, 그리고 국민정서도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히 누구를 옹호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러한 것에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당헌당규도 기소만 돼도 판결 여부는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당이라는 조치도 포함된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검찰에 우리당 운영을 맡기지 않겠다”며 이번 사건을 검찰의 탄압인양 규정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입장을 완전히 바꾼 셈이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검찰 수사에 대해 거듭 머릿속에서 사죄를 드린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고개숙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의원 등에 대한 출당조치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금주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서 공식안건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하라 운동본부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관에서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민의당 이성일·최인정 도의원, 의회직 도전

### 이 의원, 제1부위원장 출마 예정… 최 의원, 교육위원장 후보 나서… 더민주 협치 여부 주목

국민의당 소속 이성일(군산4), 최인정(군산3) 도의원이 제20대 의회직에 도전한다.

이들은 28일, 29일 전북도의회 분회회의장에서 정견발표 후 더민주당 소속 후보들과 경합을 벌인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 모두가 의회직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다. 이성일 의원은 제1부위원장에 정식 출마할 예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조병서(부안2) 의원과 맞서게 된다.

또 최인정 의원은 교육위원장 후보로 나선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결과를 두고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단 28명의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8명에 불과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수적으로 열세

이지만 정당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제1부위원장은 이성일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흘러 나온다.

재선인 이성일 의원은 현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위원회 중심으로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다.

인맥부분에서도 합격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더민주당 탈당 이전부터 의원들간 끈끈한 인연을 맺어왔다.

의원들 사이에서 끈끈함과 함께 신중함이 미흡하지만 반면에 성품이나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게다가 더민주당 내부적으로 국민의당에 1석을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

원들도 있어 결과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더민주당은 모두 독식할 경우 막대한 비난을 감수해야만 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지난 4.13 총선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뜩이나 더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안좋은데 설상가상으로 자리 목숨까지 내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입지는 더욱 조그라들 수밖에 없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더민주당은 신뢰성 회복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꼽는다. 총선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면서 “더민주당이 부담을 줄이고 협치의 손상을 가져 오지 않도록 최소 한석을 내주면 서로 명분은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야당 ‘최저임금 7천원 이상으로 올려야’

야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와 재계를 향해 최저임금을 7,000원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2017년에는 최저 임금(시급) 7,000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그 어느 때 보다 악화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 임금(시급) 인상을 최소 두 자리 수 이상 인상시켜 7,000원 이상이 되도록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니 만큼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심의를 촉구한다”며 “특히 매년 고장난 레코드판과 같이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사측(경영계) 위원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부터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 김종인 빠진 ‘경제비상대책기구’ 누가 이끌까

### 변재일 정책위의장 ‘콘트롤타워’ 역할… 김종인, 계속 실권 행사할듯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자신이 추진하던 ‘경제비상대책기구’의 수장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누가 이를 이끌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더민주에 따르면 ‘경제비상대책기구’는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유능한경제성장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하기로 했다.

해당 기구는 일단 “정책 추진에는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김 대표의 뜻대로 정책위 산하에 두기로 했다. ‘콘트롤타워’ 역할은 우선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김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것을 내가 하게되면 차기 지도부가 불편해 할 것”이라며 “나는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있고 나름의 활동 반경과 영역을 갖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많은 자유를 구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사실상의 ‘독자세력화’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대표직이 끝난 뒤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선 밀그림’을 그리기 위해 당 안팎에서 자유롭게 제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권을 발휘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김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의 ‘판매메이커’를 맡고 싶을텐데, 당내 직책을 맡지 않는다고 해서 스피커의 불륜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위원으로는 현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과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철희 의원, 그리고 당 유능한경제성장위원장 강철규 교수가 우선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외부위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김 대표가 굳이 당직을 맡지 않기로 한 것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류 측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대표 측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대선 때까지 추진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만큼, 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 어떤 대선 후보든지 해당 정책을 수용해야 수권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대선 후보에 대해서 김 대표가 ‘킥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성주 기자

## 이병도 발의 ‘전주시 나라꽃 육성사업 조례’ 통과

전주시의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 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3회 정례회 제2차 분회의에서 이병도 의원(인후3, 우이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전주시 인문학 진흥 활성화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기본시설 뿐 아니라 독서와 토론문화 진흥,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오정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주시가 인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하여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주시가 인문학으로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이병도 발의 ‘전주시 나라꽃 육성사업 조례’ 통과

전주시의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 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3회 정례회 제2차 분회의에서 이병도 의원(인후3, 우이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나라꽃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무궁화 가로수 식재, 무궁화 공원 조성, 무궁화 보존·보호 등 무궁화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필요한 ▲ 무궁화 모목식재·관리 사업 ▲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사업 ▲ 무궁화 관련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 ▲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나라사랑과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